

이낙연 국무총리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지역지원 대책' 발표

시민들 '허탈과 분노'... "재가동 바랐다"

지역숙원사업 지원 · 실직자 취업대책 · 조선업체 자금 지원 등에 그쳐... 조선업 근로자 · 협력업체들 실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지 20일 만에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군산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열고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하지만 조선소 재가동과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닌 지역숙원사업 지원, 실직자들 취업대책, 조선업체 각종 금융·정책 자금 등에 그쳐 조선업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다른 어떤 대책이나 대안보다 조선소 재가동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가 지난 1일 선박 수주 절벽에 따른 일감 부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뒤 내놓은 정유은반선(11만4000t급)을 끝으로 도크(선박을 건조·수리하기 위한 시설)를 모두 비웠다.

지역민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새 정부의 대선공약인 '군산조선소 정상화'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청와대 앞에서 군산조선소 종치를 위한 1인 피켓 릴레이 시위도 자발적으로 이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과 함께 6~7척의 초대형 선박을 배정해 야하는 현대중공업 측이 부정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도민과 사회단체, 정치권 등과 결집해 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머리 맞던 당정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근성과 끈기를 발휘해 군산조선소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또 선박 펀드를 이용한 신조 물량 배정,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초대형 유조선(VLCC) 10척 일부의 군산조선소 대체 투입 등을 요청해 왔다.

군산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인 130만t급 도크와 1650t급 플리팅 크레인 등을 갖춘 초대형 조선소로 지난 2010년 3월31일 준공식을 하고 선박 건조에 돌입했다.

1조 2000억원이 투입된 이 조선소는 연간 18만t급 28척의 건조능력을 갖추고 성장의 거점으로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 왔다.

본격적인 철수가 시작되면서 군산조선소

86개 사내의 협력업체 가운데 대부분 업체가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했고 근로자 5,250명은 대부분 실직해 끼니를 걱정할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역 경제의 총격을 완화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해왔다"며 "군산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지역민들은 들끓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7년전 부른 꿈을 안고 울산에서 군산으로 회사를 옮기고 투자를 했는데 조선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빚쟁이로 전락, 오갈 데가 없다"는 하소연

을 했다. 이제 군산시는 인구감소는 물론 산업단지의 경기침체, 지역업체의 붕괴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은다.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군산시는 조선소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 본사 수차례 방문, 범도민 서명운동, 각계각층의 성명서 발표, 국회 토론회, 1인 릴레이 시위, 범도민 결의대회, 정치권과의 협력 체계 구축,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군산=장형 기자

민주당 도당 '전북권역몫 찾기' 성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추진한 전북권역몫 찾기가 성과를 나타냈다.

전북의 8+2 공약이 모두 반영되었고, 새만금도 주요한 과제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정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촛불혁명이 요구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국정운영 계획에는 국가 대개혁과 기득권 철폐, 적폐청산, 일자리 등 촛불혁명이 요구한 국민의 기대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는 전북도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공약 기획단을 구성해 전북공약을 기초한 계 시작이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약을 공모한 것을 포함시키는 노력도 한몫했다. 아울러 전북공약 기획단에서 도출된 공약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 전북의 공약으로 관철시키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전북도당은 대선 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북 14개 시군을 돌며 전북도당과 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북의 10대 공약에 근거한 세부 시행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650여쪽에 달하는 '대통령 전북공약 실행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이낙연 국무총리,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국토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수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특히 비공개로 청와대에 전달된 487개 실천과제에는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기도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으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차별받는 전북에서 잘살고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과 당대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하는 정부가 전북의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며 "전북도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소방·해양 외청 독립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제외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며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 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하고 산업통상 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해경은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정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정사업 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뉴시스

靑 "국정상황실朴정부 문건 504건"

"2014년 3월~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서" 보수단체 지원·삼성물산 합병 등 내용 담겨

청와대는 지난 18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 분류 작업 결과 총 504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상황실 발견 문건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2015년 4월~6월 작성된 '국정환경 진단 및 운용기조'라는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성

철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는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며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

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중히 하고 관계 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부처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 기능을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포털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입 환류제도 검토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

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분리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 점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도 공동육아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었다"며 "이 문건들은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과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국립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JEONJU NATIONAL UNIVERSITY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JEONJU NATIONAL UNIVERSITY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